

# 후보군 6~7명…경선룰싸고 신경전 예상

■ 민주 대선후보 어떻게 선출하나

6·9全大로 8월 중순 후보 확정 가능성

안철수 원장 당내 경선 참여 최대 변수

새누리당이 대선후보 경선 룰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주하는 여권과 달리 야권에서는 6~7명의 후보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어 경선룰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되면 각 후보 진영이 유리한 경선룰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을 통하도록 당헌에 규정된 새누리당과 달리 두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인단 구성을 비롯한 경선 방법, 대통령 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당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당은 신임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대선후보를 발표시켜 세부적인 경선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 당헌에서는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실시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22일까지는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하지만, 신임 지도부 선출 전대 날짜가 6월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후보 선출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 경선 시작, 8월

중순 후보 확정'의 일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당직자는 "지난 17대 대선 때 후보 결정이 10월에야 이뤄져서 본선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일찍 후보를 뽑도록 했지만, 이번엔

당 지도부 개편과 국회 개원 등이 겹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의 핵심 변수

는 안철수 서울대용과학기술대학

원장의 참여 여부다.

정치권은 안 원장의 대선 출마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 원장과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

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문성근 대표 대행은 안 원장이 민

주당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한 뒤 단일화를 해야한다면 방법은 여론조사뿐인데 여론조사는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민주당의 일정대로 대선후보는 결정된다.

하지만, 비노(비노무현) 세력 인사들은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지난 서울시장 경선처럼 여론조사와 국민참여경선 등을 합치는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 대권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도 "안 원장 나름의 스케줄이 있을 것을 그리고 일방적으로 재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에 동조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통합진보당 후보나 안 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다시 밟게 돼 야권 전체의 최종 대선 후보 결정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수정협상 난항…59개 민생법안도 물건너가

고 협상을 재개 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한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가 오후로 연기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내부 비판에 부닥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요구로 뒤늦게 수정 협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법안 지정 요건을 5분의3(180석) 이상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로 규정된 신속처리법안 처리시한도

# 국회 '몸싸움방지법안' 처리 무산

여야 수정 협상 난항…59개 민생법안도 물건너가

고 협상을 재개 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한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가 오후로 연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및 의원총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후 국회선진화법안 신속처리제 적용요건

로 뒤늦게 수정 협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법안 지정 요건을 5분의3(180석) 이상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로 규정된 신속처리법안 처리시한도

180일로 줄이며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선정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폭 수정은 가능하지만 원안 골격까지는 바꿀 수 없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속처리법안 요건을 180석에서 150석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속처리제의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앙당은 추가 협상을 열어뒀으나 본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아 주요 합정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 내(다음달 28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당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과 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자유수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 문성근 “MB정권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 촉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공정언론공동행동’은 2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언론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징계를 당한 언론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사와 공영통신사의 독립적인 사장 선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로 이루어진 공동정책협의회 구성을 함

의했다.

민주당 문성근 대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 4년간 언론자유가 완벽하게 암살되고 말았다”며 “언론장악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임기 내내 가장 공들인 분야가 언론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 언론장악 의도와 주도자들을 국감과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소속 의원과 당선자, 파업 언론사 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계단에서 ‘언론탄압 규탄 및 언론자유 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끌까지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서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직 유지”

盧 전대통령 서거 3주기 내달 23일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3주기가 열리는 다음달 23일까지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무현재단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노무현재단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 이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까지 이사장직을 책임지고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문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여 5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행사가 끝나는 5월 말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후임 이사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문수 “박근혜, 경선룰 고치자며 탈당까지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4일 자신의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룰 변경요구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거부한데 대해 “과거의 경선 룰 때문에 박 위원장은 탈당하지 않았나”라며 공세를 폈다.

김 지사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수가 룰에 맞춰 경기해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언급에 “박 위원장 자신은 이회창 총재가 암도적 대세이던 2002년 경선 룰

을 고치자고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다 들어버린 듯 말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근거없는 상대 흡집내기”라며 “경선룰은 탈당 전 받아들여졌지만 정치개혁 요구사

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탈당했고, 그 요구가 곧 받아들여져 복당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 의원은 여권내 비박(비박근혜) 대권주자들이 대선후보 경선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현행 룰(rule) 도 국민경선”이라며 “요행을 바란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5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 극동형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세기보청기 (062)651-4477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세기보청기 (061)752-8845